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학습내용 -1] 성폭력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

1. 성폭력 관련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문제점

가. 성폭력범죄의 종류

성폭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음행매개(형법 제242조), 음화등의반포등(동법 제243조), 음화등의 제조등(동법 제244조), 공연음란의죄(동법 제245조)의 죄와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약취, 유인, 매매등(동법 제2887조)의 죄,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제299조), 강간등 상해, 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 치사(제301조의 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죄, 강도강간죄(제339조) 및 성폭법에 의해 추가로 규정된 특수강도강간죄(성폭법 제5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제14조의 2)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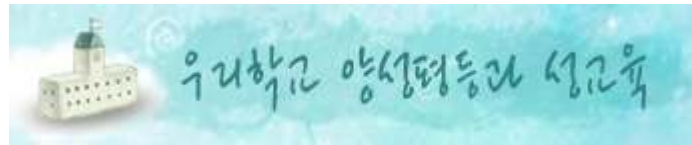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나. 강간

한거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부녀자를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행, 협박은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요하고, 상대방은 반드시 부녀자일 것을 요하며,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를 의미한다.

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에 의하여 사람(남성 및 여성)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 즉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강제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면 되는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삼지 않는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라. 성폭법상 고소기간의 특례(성폭법 제19조)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고소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성폭법상의 친고죄로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죄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성폭법 제15조), 그와 같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됨이 물론이고, 형법상의 친고죄인 단순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 비록 성폭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하더라도 고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성폭법상의 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고소기간은 1년으로 연장된다.

마.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성폭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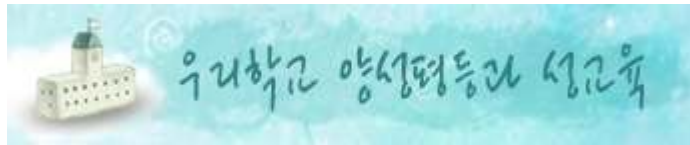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24조),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친사이 및 친족관계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 점에 입각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직계비속이 자신의 직계존속을 성폭력범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 피해자의 신원보호 등

① 신원 및 사생활비밀누설금지(성폭법 제21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 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② 심리비공개(성폭법 제22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성폭법 제22조의 2)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사. 성폭법의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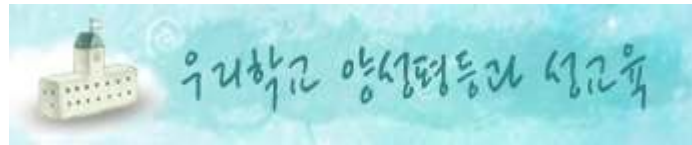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1) 성폭력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강간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법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 하에서의 폭행, 협박만을 강간죄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하고 있고, 남녀가 데이트 중에 발생한 원치 않는 성행위, 부부사이의 원치 않는 성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입장이 아닌 법해석의 관점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이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내용의 성행위가 강행된 경우 비록 그와 같은 과정에 항거불능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형법 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강간피해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간의 상황을 유인한 것과 같은 비난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객관적인 증거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여성의 신분이 확실하고 질내 사정으로 인한 질내 분비물, 눈에 띄는 확연한 외상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소위 말하는 꽃땀으로 오인되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수사기관에서는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성폭력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 하에서 성폭력행위자가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성폭력피해자가 꽃뱀이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범죄의 특성 자체가 은밀한 곳에서 행위자 및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노련한 행위자일수록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강간,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관계로(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겉옷 위로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의 경우 외상이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행위가 타인들 앞에서 행해지지 않는 한 증인을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객관적 증거로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성폭력피해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피해자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경위를 의심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기소 및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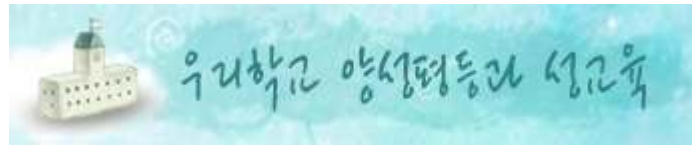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학습내용 -2]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각 규정 등에 대한 검토

가.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동법 제4조의 3에서는 누구든지 동법에서 정한 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직무상 동법에서 정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면서 신고의무의 주체로서는 '유아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직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기타 청소년보호·교육·치료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를 열거하고 있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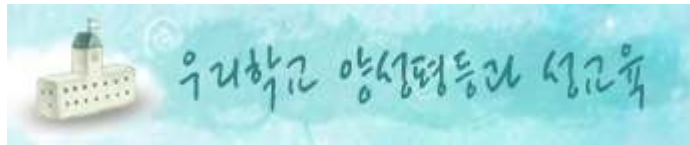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마. 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영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등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바. 그 외에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반포행위, 청소년의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 대해 성폭법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학습내용 -3] 성매매행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적처리 절차

가.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리절차

(1) 사법경찰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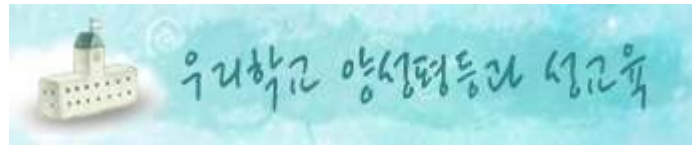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청소년성보호법 제 13조는,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이하 대상 청소년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의 규정에 의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대상청소년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사건을 수사,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 13조 제 2항),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 3항).

(2) 검찰단계

또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4조).

(3) 법원단계

소년부판사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청소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각호의 처분(보호자 등에게의 위탁,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의 위탁, 병원위탁, 소년원 송치 등) 외에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5조).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4) 소결론

결국 청소년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경우 보호대상자로 보아 성매매보호법을 통한 청소년지원 시설의 선도,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성행교정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구체적 규정(가해청소년의 처리)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폭법 제5조 내지 10조(미수범 포함)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당해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청소년이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법 제5조 내지 10조(미수범 포함)와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를 범하여 당해 사건이 관할법원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 등을 함께 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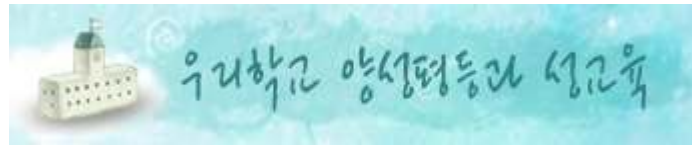
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조치와 관련한 규정

(1) 교육과정의 이수권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 21조)

(2)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결정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록대상자라고 함)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관한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현직장 및 실제 거주지 주소, 사진)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30차시] 성관련 법률 이해 및 대처법

(3) 신상정보의 등록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보등록결정에 의해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로 결정된 사실과 이유 및 등록하여야 할 신상정보를 통지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자는 그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내에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고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동된 신상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등의 규정을 두어 재범우려가 있는 청소년 대상 범죄자들에 대한 신상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4) 등록정보의 열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등록정보를 일정범위의 사람에게 열람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학원, 교습소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다

(5)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유치원, 초·중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대상 범죄행위를 한 자가 재범 위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청소년관련 시설 등에의 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